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79
----------	------

제출연월일 : 2021. 11. 1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인구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인구정책조정회의의 명칭, 구성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사업의 범위규정 신설(안 제7조)

- 지역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사업 범위 규정

나. 인구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9조)

- 위원회 명칭을 인구정책조정회의에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

라. 위원의 임기(안 제12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13조) 별도조항으로 분리

마.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안 제14조)

바. 인구교육 실시 목적 및 교육대상 정비(안 제17조)

사. 별표 신설(안 제8조 관련)

-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에 따른 대상, 방법, 범위 등 세부지원 기준 마련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불임)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0. 20. ~ 11. 10.(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불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 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관련 지원 정책
  -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다.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구조

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육청, 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인구정책사업

제7조(인구정책사업의 시행)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2.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3.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4.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5.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6.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관련 조사·연구 사업
7.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5호에 따른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장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6.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실·국·본부장
2.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3급 이상 공무원 1명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인구교육

**제17조(인구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 등 지역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있어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
4. 대학생 등 청년
5. 학교 등 교육기관 교직원
6.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7. 그 밖에 교육희망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시장은 인구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0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군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제8조 관련)

사 업 명	세부 지원내용
전입 대학생 지역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및 조건) 타 시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대구광역시에 전입신고한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li> <li>○(지원내용) 1명당 최대 8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분할지원 가능)</li> </ul>
대학교 전입협력 인센티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전입 대학생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따른 전입 대학생이 있는 관내 대학교</li> <li>○ (지원내용) 대학생 복지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지원</li> <li>○ (지원범위)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 대학생 수, 전입률, 협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li> </ul>

## 관 계 법 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

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 지역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사업내용
  -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시행

## 2. 비용 발생요인

-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사업 추진
  - 대학생 정착지원금, 대학교 전입협력 인센티브 지원

##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8조, 별표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수와 대학교 인센티브 지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내년도 예산 요구서 기준으로 추정.
  - 대학생 정착지원금 : 10,000명× 20만원× 2회(연 2회, 2년간 최대 총 4회)
  - 대학교 전입협력 인센티브 : 10,000명× 10만원× 1회(연)

## - 산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용추계	25,000,000	5,000,000	6,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대 학 생 정착지원금	소계	4,000,000	6,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산출내역	10천명×20만원×2회	15천명×20만원×2회	10천명×20만원×2회	10천명×20만원×2회	10천명×20만원×2회
	계(대상자)	10,000명	15,000명	10,000명	10,000명	10,000명
	신규	10,000명	5,000명	5,000명	5,000명	5,000명
	기존 (2차년도)	-	10,000명	5,000명	5,000명	5,000명
대 학 교 전입협력 인센티브	소계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산출내역	10,000명× 10만원	5,000명× 10만원	5,000명× 10만원	5,000명× 10만원	5,000명× 10만원

## 나. 추계결과

○ 2022년~2026년(5년) 25,000백만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서 경 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세 출		5,000,000	6,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25,000,000
	전입 및 지역정착지원 사업	5,000,000	6,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25,000,000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000,000	6,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25,000,000
	시 비	5,000,000	6,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25,000,000
	국 비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구·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등)		-	-	-	-	-	-